

[청구인] ○○○

[피청구인] ○구청장

[주문] 청구인의 청구를 「기각」 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16. 7. 18. 청구인에게 한 「식품위생법위반  
영업정지 처분」을 취소한다.

## 이 유

### 1. 사건개요

청구인은 1995. 4. 14.부터 인천광역시 ○구 ○○로 ○○○-○(○○동)에서 ‘○○○○(96㎡)’ (이하 ‘이 사건 업소’라 한다)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6. 5. 12. 22:00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도박행위를 방조하다 인천○ ○경찰서에 적발되었다.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6. 6. 17. 청구인에게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6. 7. 18.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(2016. 8. 3. ~ 9. 1.)의 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### 2. 청구인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① 사건당일 청구인의 업소에서 모 회사의 단합대회가 있었고 이 회사의 일부 인원이 술 한 잔 더 한다기에 청구인의 종업원이 이를 허락하고 퇴근한 후 적발된 점, ② 적발된 손님들은 회사 동료들로서 도박이라기보다는 오락삼아 화투를 하였던 점, ③ 청구인은 해당 손님들을 보지도 못했고 도박행위를 허락하지도 않았던 점 ④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, ⑤ 손님들의 화투 행위를 제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주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.

### 3. 피청구인 주장

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인천○○경찰서의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적발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영업장 안에 화투 등이 비치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·타당하다.

### 4. 이 건 처분의 위법·부당여부

#### 가. 관계법령

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, 제75조

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57조 [별표 17], 제89조 [별표 23]

#### 나. 사실관계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1) 청구인은 1995. 4. 14.부터 인천광역시 ○구 ○○로 ○○○-○(○○동)에서 ‘○○○○(96㎡)’ 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.

2) 청구인은 2016. 5. 12. 22:00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도박행위를 방조하다 인천○○경찰서에 적발되었고 2016. 6. 16. 인천○○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.

3) 위 2)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6. 6. 17. 청구인에게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, 2016. 7. 7.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수사 종료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.

4) 위 2)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. 7. 8.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

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.

5) 피청구인은 2016. 7. 18.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(2016. 8. 3. ~ 9. 1.)의 처분을 하였다.

## 다. 판 단

### 1) 먼저, 관계법령을 살펴보면,

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,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,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·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 17] 제6호다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 23] II. 개별기준 3.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2)에서는 [별표 17] 제6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아울러,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89조[별표 23] I. 일반기준 15호바목에 의하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.

### 2) 다음으로, 이 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를 살펴보면,

청구인은 자신이 부재중이었고 청구인의 종업원 또한 퇴근한 이후 손님들이 단순 오락삼아 화투를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해당 손님들을 보지도 못했고 도박행위를 허락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,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내에서 도박행위를 방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. 뿐만 아니라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을

운영하는 청구인이 손님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카드를 구비하여 놓자 손님들이 카드를 사용하여 도박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 손님들이 도박에 사용한 카드가 이 사건 업소 내에 비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. 이는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.

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,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명의자로서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점,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그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경감하여 이 사건 처분한 점, 식품접객영업자의 물적·인적 영업시설이 도박행위에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.

## 5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